

민주당 전당대회 ‘무관심’… 투표율 20%대로 추락

굳어지는 ‘확대명’에 흥행 실패
텃밭 호남 ‘뚝’… 영남 절반 수준
전북 온라인 투표는 오류 발생
차기지도부 대표성에 타격 전망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4일 광주·전남지역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지만, 당원들의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남은 경기와 대전, 세종, 서울에서도 당원 투표율이 30%를 밑돈다면, 선출된 차기 지도부의 대표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26.47%로, 선거인 69만7351명 가운데 18만46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중 경기와 서울 등을 제외하고 12차까지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제주 18.39%, 인천 37.76%, 강원 21.85%, 경북 47.80%, 대구 52.23%, 울산 33.49%, 부산 42.07%, 경남 35.12%, 충남 25.06%, 충북 30.36%으로 30%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희 의원 등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보이다. 호남에서 20%대로 뚝 떨어졌다.

전국 권리당원(123만1000여명)의 33.3%에 달하는 광주와 전남, 전북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25.29%, 23.17%, 20.28%에 그쳤다.

이재명 후보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당원들의 관심도는 차갑게 식은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 부산 등 영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당 대표 투표만 진행되고, 최고위원 투표는 먹통이 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온라인 투표가 40분 더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는 투표하지 않고, 경

선이 치열한 최고위원 투표만 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당 대표(20.28%), 최고위원(23.29%) 투표율이 따로 집계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저조한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 후보들도 진명(진이재명) 일색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흐름이 확인되면서 당원들의 투표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가 자칫 친명 강성 지지층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덤 전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7일과 18일 진행할 ARS(자동 응답방식) 투표도 막판에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ARS 투표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온라인 투표율을 비교하면 직전 전당대회보다 높으며 최종 투표율이 2022년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ARS가 남아있다”며 “전당대회 흥행 여부는 최종 투표율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역순회 경선은 10일 경기·대전·세종 지역을 거쳐 17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18일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새미래 “DJ 사저 매각, 김대중 정신 지우기”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 김 전 의원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미래 전병헌 대표는 5일 김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김대중과 이희호 여사가 37년 동안 머무른 사저가 개인에게 100억 원에 매각된 건 온 국민에게 충격이다”며 “김 전 의원이 DJ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건 지탄 받을 만행”이라고 사저 매각 백지화를 요청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일에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신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아 불가피하게 사저를 매각한 것”이라며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지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전략기획기부총장에는 지난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임명됐다.

당 수석대변인에는곽규택·한지아의원이 선임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홍보본부장과 대변인 등 추가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인

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조직부총장과 정 의원 모두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인사다. 신 전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다. 지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부터 활동했던 곽 의원은 수석대변인에 유임됐다. 한 의원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 당시에 영입된 인재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의도연구원장과 홍보본부장 및 대변인 인선과 관련 “일정은 알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출신 조운정 선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출신인 조운정 전 여성비전네트워킹 이사장(49)을 지명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에서 협의하고 당무위에서 인준된다”며 “지난 3월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조 전 이사장은 오늘 최고위에서 당에 미래가 있어 보인다는 인사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지역 안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필·김선민 최고위원과 조 대표가 각각 울산, 서울, 부산 출신인 점을 감안해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으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29~30일 곡성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원내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 단독 처리

민주, 양곡·한우법 등 당론 채택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당간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문 발표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이날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 개최 전 3개 법안(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안법)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폭등할

경우 정부가 매입·판매하는 등 의무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업 진흥 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檢 ‘무더기 통신조회’ 의혹에 “법 위반 여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 용자정보 자료를 조회한 의혹에 대해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후 브리핑을 통해 “(통신 사찰 의혹) 문제를 당 검찰독재정지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부패 수사 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 (탄핵 소추사건) 조사를 할 때 이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언급한 검찰의 통신 대규모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통신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법적 기한인 30일을 넘긴 8월에 통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운영하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김선욱 기자